바른사회시민회의 2021.8.4.

법 앞의 평등을 위반하는 차별금지법

2021.08.04

강원대학교 경제학과
민경국 명예교수

목 차

I. 차별금지법의 특징: 평등주의와 제로섬 마인드,
II. 법 앞의 평등은 자유주의 가치

III. 역차별을 초래하는 차별금지법

IV. 온정주의 국가에 의존하는 차별금지법

V. 법 앞의 평등: 동성애문제에 대한 자유주의 해법

VI. 부록: 차별금지법과 존 스튜어트 밀

I. 차별금지법의 특징

□ 차별금지법의 입법취지

▶ 헌법 제11조 1항

- (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.) 누구든지 성별·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·경제적·사회적·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'

□ 차별금지법의 내용

▶ 모집, 채용, 승진, 임금책정 자금의 융자 등에서 여성, 소수민족 지방출신, 저학력의 소유자, 기간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차별은 금지.

▶ 대졸 또는 경력자 등, 채용조건은 불법

- 지원자격을 '4년제 정규대학 졸업 또는 동등 학력 이상 소지자'로 제한한 것은 고용 차별에 해당(고졸자의 응시기회 박탈)
- 채용과정에서 학교별 서열을 매기는 것도 학력차별

I. 차별금지법의 특징

□ 차별금지의 예

▶정규 직원을 모집하면서 지원자격을 '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'로 제한

-고졸 배제

▶대학교 서열을 정하고 채용 시 서열에 따라 가산 점을 부여하는 것.

-지방 대 출신에 대한 불리한 대우

▶ 성별, 출신나라에 따라 노임에 차등을 두는 것

▶ 학력(學歷)에 따라 채용 승진 노임 등에서 차등을 두는 것

-학벌주의 조장

▶ 어느 한 회사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관리직 승진을 거부하는 것,

I. 차별금지법의 특징

▶주택관리 회사가 어린 자녀 수가 많다는 이유로 주택임대를 거부

▶ 종교적인 이유로 교수채용을 거부,

▶ 어느 회사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채용, 승진을 거부.

□ 차별금지법의 특징

▶경제적 사회적 약자를 우대하는 정책(평등주의)

▶경제적 사회적 약자는 스스로 대학에 입학할 또는 일자리를 구할 능력이 부족 그러니까 국가의 도움이 필요(온정주의 국가관)

▶기업 대학 은행 등의 강자우호적인 불합리/ 그러니까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개입이 필요

▶사회를 남-녀/ 종교/인종/ 지방-중앙/능력-무능/ 저학력-고학력/ 내국인-외국인 23개의 범주로 갈라치기: 제로 섬 마인드.

- 지방대생이 취직을 못하는 이유= 서울에 대학이 존재하기 때문

I. 차별금지법의 특징

-남자(여자) 때문에 여성(남성)의 취업 승진에 문제/

-서울대/연/고대의 존재 때문에 대학의 서열이 생겼고 이게 사회전체에 악영향/학벌주의도 형성

-갑은 자신이 활동하는 분야에서 자신보다 능력이 우수한자가 있기 때문에 갑의 위치가 나빠짐, 을도, 병도 제각기 자신보다 우수한 능력의 보유자의 존재 때문에 경제적 위치가 나빠졌다는 믿음

▶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음

□ 강의 주제

▶ 차별금지법은 법 앞의 평등을 위반, 그 결과 역차별, 자유의 제약.

▶ 제로 섬 세계관 원시적 마인드 /Big Government. 자유와 번영을 파괴함.

▶ 인간들의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법 앞의 평등을 실현 문화적 진화의 선물

Ⅱ. 법 앞의 평등은 자유주의 고유한 가치

□ 법 앞의 평등

▶ 18세기 이후 신분 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

▶ 투쟁의 목표: 평등한 자유./법 앞의 평등은 자유주의의 고유한 가치.

▶ 법 앞의 평등이 자유주의와 부합하는 유일한 평등.

□ 법 앞의 평등 vs. 차별금지법

▶ 법 앞의 평등은 개인의 서로 다름을 인정.

- 본성과 양육을 통해서 사람들의 잠재력에서 차이가 있음.

▶사회주의는 다름을 인정하지 않음 그래서 평등분배가 목표

- 차별금지법은 서로 다른 사람을 똑같게 만드는 정책
- 분배평등(결과평등)을 목표로 함.
- 차별금지법은 사회주의의 고유한 가치.

Ⅱ. 법 앞의 평등은 자유주의의 고유한 가치

	법 앞의 평등	차별금지법
1	자유주의 가치	사회주의 가치
2	개인의 다름을 인정	개인의 다름을 부정
3	평등한 대우	우대정책

III. 차별금지법의 우대정책과 역차별

□ 짐 크로우(Jim Crow) 법

▶ 1876~1965 까지 흑인/백인을 분리시키는 방식으로 차별을 자행.

짐 크로우 법이 해체되면서 빈곤과의 전쟁과 함께 우대정책(Affirmative Action)

▶ 흑인, 소수민족, 빈곤자 여성을 우대하는 정책(대학 입학/ 일자리)

□ 차별금지법을 통한 우대정책

▶ 여성 할당제/ 기업의 여성승진정책/ 지역 인재할당제/ 청년고용할당제

▶ 우대정책은 역차별을 불러왔음.

- 여성의 지위를 남성과 동등하게 만든다는 이유로 여성 채용에 가산 점 부여/남성을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것과 같음.

III. 차별금지법의 우대정책과 역차별

- 지역 인재할당제; 중앙의 인재에 대한 차별
- 금융기관의 대출, 신용카드 발급 등에서 저신용자에 대한 특권 부여, 고신용자의 역차별.

□ 우대정책의 결과

▶ 미국:

- 빈곤문제를 더 악화 (코브라 효과)
- 백인들은 역차별로 일자리는 빼앗겼다고 느꼈음

▶ 한국

- 고용상의 차별금지 강화로 기업경영 위축, 일자리 축소라는 고용 리스크가 우려/ 차별금지법은 기업들에 부담과 골칫거리가 될 수 있음.
- 소수에게 특권을 주고 성실한 사람이 역차별 당할 수 있음.

IV. 온정주의 국가 vs 법치국가

□ 온정주의 국가관

▶소수민족/ 여성저학력자/지방출신자 등은 정부의 적극적 도움이 없이는 대학진학과 취직도 불가. 비정규직은 국가의 도움이 없으면 금융대출도 불가

-그들은 강력한 남성/중앙출신자/다수민족/정규직 등과 불공정한 경쟁

▶기업은 모집 고용 승진에서 차별은 불합리; 대학의 학생모집/ 교수 채용에 차별은 불합리; 국가가 개입하여 기업 /대학의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

▶금융기관도 대출결정에서 차별은 불합리, 그래서 법으로 차별금지가 합리적

□온정주의 국가관의 한계

▶ 국가가 저학력 고학력 지방출신자의 가치, 여성·외국인 근로자의 가치, 그들의 모집· 채용·고용·승진 노임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함.

IV. 온정주의 국가 vs. 법치국가

▶ 지식의 한계 그래서 정부가 합리성/불합리성의 판단은 불가능

▶모집· 채용·고용·승진과 관련, 학력, 성별, 국적에 의한 차별을 법률로 규제할 수도 없고, 정한다면 과도한 규제.

□ Big Government

▶모집 채용 승진에 대한 기업규제의 증가/ 일자리와 대학입학 할당제 교육에 대한 규제

▶조세의 증대/정부지출 증대/

□ 채용 고용 승진의 가치, 노동자의 가치가 결정되는 요인

▶ 모집· 채용·고용·승진의 가치는 수요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, 피고용자의 필요에 의해서 창출되는 게 아님. 그 가치는 피고용자의 능력이나 재주에 의해서 창출되는 것도 아님

IV. 온정주의 국가 vs. 법치국가

- 제아무리 멋진 마차를 만들 재주가 있다고 해도 마차에 대한 수요가 없다면 그런 재주의 가치는 제로
- 저학력이나 고학력이나 여성·외국인 근로자의 가치는 여성 또는 외국인의 노동의 생산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그들의 욕구나 능력 자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님

IV. 온정주의 국가 vs. 법치국가

□ 가치 결정은 시장에 맡겨야

▶ 자유시장경제: 최종 수요에 의한 가치결정

▶ 법 앞의 평등이 지배하는 자유시장: 학력 능력의 불평등 문제

- 더 잘하는 능력을 지닌, 학력이 높은 사람의 존재: 그로 인해서 특정인은 나빠질 수 있음

-그 사람은 공동체에 이득; 알려져 있지 않은 수많은 사람에게 이익

□ 학벌주의와 자유사회

▶학력이 아닌 '학벌에 의한 차별 피해가 있을 수 있음

-학력과 능력에 의한 가치창출이 시장의 수요자에 의한 평가와 독립적인 경우 학벌이 중요함: 관료시스템과 정치질서

▶소유 인격 존중, 정직성, 법 앞의 평등이 지배하는 열린 사회에서는 학벌에 의한 차별이 가능하지 못함

V. 법 앞의 평등:동성애문제에 대한 자유주의 해법

□ 법 앞의 평등

▶ 법 앞의 평등은 자유를 파괴하지 않고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평등.

- 누구나 평등한 자유를 보장(보편적 추상적인 정의의 규칙: 사적 소유 계약의 자유 책임원칙) 그런 자유 속에서 자신의 능력 재주 노력을 동원하여 자신의 목적을 추구

□ 동성애를 어떻게 보아야 하나?

▶ 동성애에 대한 차별금지는 종교계를 자극.가톨릭 학교라고 해도 동성애자를 채용할 의무가 있기 때문. 입양을 거부할 자유가 없음.동성애자가 어린아이를 입양할 권리가 있는 사회에서는 그 입양기관이 가톨릭 단체라고 해도 동성 부부의 입양신청을 거부할 수 없음

V. 법 앞의 평등:동성애문제에 대한 자유주의 해법

▶동성애의 권리는 종교단체의 신앙의 자유를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. 종교 단체가 동성애 권리를 부여하는 정책을 반대하는 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음.

▶그렇다고 해서 동성애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그의 자유를 무시할 수 없음.

-본의 아니게 동성애자가 된 것임.

□ 동성애문제의 해법: 자유주의의 법 앞의 평등

▶그 해법은 중세의 종교전쟁의 해법에서 찾을 수 있음

-동성애평등권 운동과 종교의 분쟁을 종교전쟁과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반응이 있을 것임

▶종교전쟁의 해법에서처럼 각자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상호존중

-양측에게 평등한 자유를 허용/상호존중이 자유주의 가치이자 앞의 평등.

VI. 부록: 차별금지법과 존 스튜어트 밀

□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

- ▶ 법 앞의 평등은 자유를 파괴하지 않고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평등.
- ▶ 밀의 자유론의 핵심은 해악의 원리.
- ▶ 타인에게 해악을 미치지 않는 한 자유롭다
- ▶ 어느 한 사람이 타인에 미치는 그 해악은 그 사람의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서 야기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특정한 행동을 타인에게 하지 않음으로써 야기될 수 있음

□ 예를들면,

- ▶ 고용자가 생활노임 이상으로 노임을 주지 않아서 노동자가 고통을 당하는 경우
- ▶ 정교수 채용을 거부한 대학은 흑인에게 고통

VI. 부록: 차별금지법과 존 스튜어트 밀

- 어린애들이 있다는 이유로 아파트를 임대하기를 거부한 부동산 관리회사는 어린이 엄마에게 고통
- 여자라는 이유로 여성의 승진을 거부한 회사는 여자에게 고통

□ 작위와 부작위

- 차별금지법은 어느 한 사람과 거래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즉 부작위로 피해를 야기.
- 부작위는 법률과 관계가 없음. 법의 역할에서는 누가 타인의 인격이나 재산 또는 건강과 자유를 침해했는가가 중요. 그 침해자를 찾아내어 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법의 역할이다. 부작위는 침해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.

감사합니다